

# 산업보건 주요뉴스

##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등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목),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를 150명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보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1회당 심의건수 축소, 연간 회의횟수 증가, 상병분야별 통합심의 체계 확립을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 ②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현재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할 경우 의료기관과 거주지간 이동에 발생하는 교통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간에는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마을버스 환승시스템 등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맞지 않고 실제 거리에 대한 다툼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리제한 1km 규정을 삭제하여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 ④ 장애심사를 위한 출석 교통비 지급근거 신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지급근거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하였으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이동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장애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영어판) 제작·배포

### ①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대처하는 요령 등 안내

고용노동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언어소통의 제약이나 낮은 환경 등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영어판)」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후 많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영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요청하여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간되는 이번 영어 리플렛은 건전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권리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리플렛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는 물론, 외국인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이주노동자상담소 등에 배포(20,000부)하여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근처 재활·복지 서비스기관 한번에 검색 OK!

### -근로복지공단, '희망맵' 조회 가능 기관수 2배 이상 확대

관할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와 서비스, 고객이 입맛에 맞게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물음에서 출발했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정보공유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 3.0의 철학이기도 하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산재근로자가 거주지 인근에 있는 각종 재활·복지 서비스기관의 연락처, 위치 정보 등을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맵'을 통해 산재근로자는 개별 특성에 따라 재활인증 의료기관, 재활스포츠 기관, 심리상담 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 의료·사회심리·직업재활 서비스 기관을 행정구역 또는 관할지사별로 손쉽게 조회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일반 사회복지기관의 정보도 검색할 수 있어 산재근로자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유용하다.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조회 가능 기관수를 두 배 이상(6천개소 → 1만 2천개소) 늘리고, 활용 우수사례 공모,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도 안내 등으로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0월부터는 화면크기를 확대하고 지도 검색 기능을 개선하는 등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료관리 기능 추가와 서비스 이용 의견 게재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